



2017년 12월 18일(월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12. 18.(월)	담당부서	산업정책과
담당과장	김완기 과장(044-203-4210)	담당자	우성훈 서기관(044-203-4211) 김태형 사무관(044-203-4214)

산업부, 『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』 발표 - 함께 하는 산업혁신, 다 함께 혁신성장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백운규)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‘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’을 수립했다.
- 12.18(월) 10: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.
- 이번 정책은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업계와의 간담회와 산업 혁신민관전략회의(12.6)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.

<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주요골자 >

- ◇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
- ①산업혁신(주력산업 + 신산업), ②기업혁신(대기업 + 중견 + 중소기업), ③지역혁신(수도권 + 非수도권) 등 「3대 분야 혁신」 추진
- ⇒ '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+a 창출 추진

<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: 3대 전략 6대 정책과제 >

추진전략	정책과제
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	①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② 주력산업 성장활력 회복
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강화	③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 ④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
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	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⑥ 지역의 혁신성장 확충 지원

수립배경

□ 특정 산업·기업·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‘성장의 착시현상’을 야기하여,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노정

○ 최근 수출 등 실물경제 회복세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감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긍정적 기회

* “지금이 적극적 구조개혁을 위한 적기” (IMF, '17.11월)

□ 중국은 물론, 미국·독일·일본 등 선진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 (“산업정책의 부활”)

▸ 스티글리츠 교수(J. Stiglitz)는 적극적 노동정책,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**정부 개입과 산업정책 부활**을 주장 (『The Rejuvenation of Industrial Policy』, 2015)

○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

* 제조업경쟁력지수(UNIDO, '16년) : 세계 3위 / ICT 발전지수(ITU, '17년) : 세계 2위

○ ①**산업혁신**(주력산업 + 신산업), ②**기업혁신**(대기업 + 중견 + 중소기업), ③**지역혁신**(수도권 + 비수도권) 등 「3대 분야 혁신」이 필요

□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‘산업 → 일자리 → 소득’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

<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추진기조 >

구 분	기존 산업정책	새로운 산업정책
산 업	▸ 특정산업 의존	▸ 주력·신산업이 함께 성장
기 업	▸ 대기업 중심	▸ 대·중견·중소기업이 상생 발전
지 역	▸ 수도권 편중	▸ 지방·수도권이 균형 발전

1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산업 창출

-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, 플랫폼 제품 중심의 '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' 우선 착수

분 야	주요 내용
(미래 모빌리티 사회) 전기·자율주행차	▸ '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▸ '22년 전기차 보급 35만대
(초연결 사회) IoT 가전	▸ 빅데이터,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개발 ▸ 가전, 건설, 통신, 자동차, 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
(에너지 전환) 에너지신산업	▸ 분산형 발전확대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창출 ▸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, 분산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
(수명연장과 고령화) 바이오·헬스	▸ 빅데이터+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·서비스 개발 ▸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
(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) 반도체·디스플레이	▸ 후발국 격차 5년 이상 확보 (글로벌 No.1) ▸ 대규모 적기투자 및 차세대 기술확보 병행 추진 (차세대 메모리·파워반도체,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)

- 원천기술 확보, 네거티브 규제 개선, 석·박사급 혁신인재 육성, 민·관 공동펀드* 조성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 주력

* 자율자동차, 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,000억원 규모로 조성

2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

-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,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
-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,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 강화

*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시 경쟁력 분석체계 구축, 금융당국과의 협의체 구성 등

- 新북방·新남방 등 전략적 시장 진출 강화 및 수입규제 적극 대응*

* 업계, 우호세력 연계 및 국제공조 모색,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검토

- 사물인터넷(IoT)·인공지능(AI) 등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해 생활밀접 분야 중심으로 제조-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창출

③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 (「중견기업 비전 2280」)

* 「중견기업 비전 2280」 :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 80개 육성 ('15년, 34개)

-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·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
-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·R&D 지원,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 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촉진

④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추진

- 10대 업종별로 '상생 협의체'를 구성하고,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·프로젝트 개발·확산 유도
- 생산현장 고도화(스마트공장),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추진(중기부·동반위 협조) 등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적극적 조력자 역할 강화

⑤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서 「국가혁신클러스터」 육성

-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'국가혁신 클러스터' 조성
- 인센티브(보조금·R&D우대, 지역개발 특례) 확대, 산·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'국가혁신클러스터'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

⑥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

- 산·학융합 촉진을 위한 '산·학융합지구' 확대('22년까지 15개), 근로·정주환경 지속 개선 등 산업단지 혁신 추진
-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, 지역 공동체 수요 대응 → 지역 일자리 창출·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 조성

후속일정

- 오늘 발표한 「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」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·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임
- 중견기업 육성,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, 자동차, IoT 가전,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 추진

※붙임 : 「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」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김태형 사무관(☎ 044-203-42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